

## 기술혁신역량 강화 및 중국 대응 방안



서주원 대표이사  
벤처기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한정된 연구개발 재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 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성과의 사후적 관리뿐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성과활용을 염두에 둔 전 주기적 성과중심 연구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 기술성 평가뿐 아니라 선행특허분석을 통한 원천, 핵심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방향 수립 및 시장에 기반 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주관의 차세대성장동력과제, 중기거점과제 및 차세대 신기술 과제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큰 연구개발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여 고용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국민경제의 기여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원천기술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고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해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가운데 등록 후 5년 동안 사업화가 되지 않고 있는 미활용 특허의 조사, 발굴 작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술이전을 매개로 한 연구소·대학·중소기업간 새로운 기술협력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기술이전에 대한 수요 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산업 분류별, 지역 산업단지별, 품목별 그리고 클러스터별로 세분화하여 이전 기술과 해당 기업을 매칭시켜 나가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대내적인 기술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꾸준한 협력 모델 발굴 외에, 대외적인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

기 위한 방안 수립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술무역수지의 적자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기술수출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술의 활용범위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확대해 기술 수명주기에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의 적자규모는 2001년 2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에는 27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해서는 22억달러의 적자를, 일본에 대해서는 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하여 기회와 위협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보호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중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했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이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위주로 되어 있어 중국의 수출이 신장되면 한국의 수출도 증가해왔다. 그러나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기술우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및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산품 수출이 많아 공산품의 모방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보호 및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산업자원부는 KOTRA 내에 지적재산권지원센터를 두고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반 기본 정보 수집과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특허소송 및 분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경우 북경지식산업권, 상해지식산업권, 북경기술교역중심 등과 MOU를 맺고 지적재산권 침해사태에 대한 중국 사법기관 및 행정기

관에 대한 법률적 대응, 중국 모조품 사례 파악 및 단속을 위한 사설기관 활용, 중국 정부의 지적권 관련 법제 분석, 정보 파악 및 보호 정책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권보호 및 대응과 병행하여 국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을 가진 중국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중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특허 권리보호 및 특허분쟁 대응 면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마케팅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경감시켜 보다 효과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특허심사서비스 미국으로 수출된 국제특허출원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특허심사 서비스를 미국으로 수출한다.

특허청은 작년 12월 22일 미국특허상표청장 Jon Dudas와 선행기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 특허청이 미국의 특허출원인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르면, 기업 또는 발명가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세계 12개 선진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과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에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성 여부에 관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각국은 자국 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 최대 PCT 국제특허 출원국('04년: 43,400건)인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 특허청 외에 유럽특허청(EPO)만을 미국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외국특허청으로서는 유럽특허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받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한국특허청의 심사품질이 세계 최고수

준에 이르렀다는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으로서, 지난 10월 우리 특허청이 PCT 국제조사기관의 필수문헌(minimum documentation)으로 인정받은 것과 함께, 지적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지적권 규모면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제4위,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제7위, 미국에 대한 외국의 특허출원 세계 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5월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제경쟁력지수에서도 특허생산성(연구개발인력 1000명당 특허등록건수) 세계 2위, 내국인 특허획득건수 4위를 차지하는 등 지적권 분야는 명실공히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작년에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적권 최강국인 미국에 대한 특허심사수출을 계기로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특허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적권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